

文대통령, 박주선에 “대선 전 일 잊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영수회담에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선거 전에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자. 큰 강을 건넜으니 뗏목을 잊고 새로운 일을 하는 방향으로 협치를 하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영수회담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선거 전에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자. 큰 강을 건넜으니 뗏목을 잊고 새로운 일을 하는 방향으로 협치를 하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또 대통령 발언 직후 “야당의 견제고도 당연한 비판과 대안 요구에 대해서 무조건 ‘정치공세다’, ‘국정 발목잡기다’ 하면서 정부여당의 뜻대로 국회를 운영하려는 자세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 “협치 하자 취지에 인식전환 필요 지적”
“추경, 文대통령도 일반 공무원 증원 찬성하지 않는다”
“남북 군사·적십자회담 미·일에 사전 통보·양해 구해”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 20일께 이낙연 국무총리 대책 발표”

원칙' 후퇴 논란에 대해서 “원칙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흡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자상하게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사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관해서 “일반 공무원 증원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번 공무원 증원 계획은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충북지역 특별재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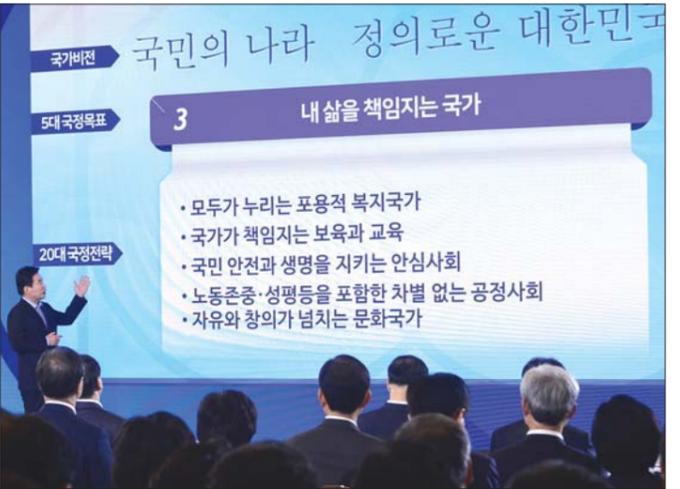
선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내지 복구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선언과 관련해 “재협상 얘기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일체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에서 (FTA 개정·수정)에 합의하더라도 각 국가에서 국회 동의·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 하에 개정·수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군사·적십자회담 제안 등 대화·교류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 기조에 대해서 “사전에 미국, 일본에 통보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비핵화 관련 대화와 인도주의·비정치적 대화는 구분해 비핵화 관련 대화는 조건 충족되면 가능한 것으로 미국과 협의돼 있고 그 조건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는 게 문 대통령 설명)”라며 “(문 대통령) 본인이 생각할 때 조건이란 비핵화 선언이나 핵동결 정도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일본 언론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비핵화에 관한 대화와 인도주의적 대화가 질 의응답 과정에서 혼선된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군산조선소 폐쇄 및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에 대해 오는 20일께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책 발표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이 밖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를 지적했지만,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발언해 사실상 탈원전 정책 계속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당이 지적한 방송 공공성 회복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뉴시스

文정부 밑그림 공개...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

문재인 정부를 향후 5년간 이끌 국정운영 밑그림이 19일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0여일의 활동을 토대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국정목표로 가다듬는 작업을 벌여왔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위의 활동 결과를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가 아닌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취지로 공개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고 주체인 국정기획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정부 부처 장관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활동을 종료한 국정기획위로부터 이날 최종보고를 받은 뒤 100대 국정과제를 세부적으로 다듬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왔던 국정기획위는 5월22일 출범해 지난 14일 해단식을 끝으로 54일 간의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이 기간을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타가 될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50여일 간 총 85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290여 회에 걸쳐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받았다. 공식적으로 8회의 전체회의, 210회의 분과회의를 벌였

으며 총 500여 차례의 논의과정 끝에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뼈대로 5대 국정목표를 잡았고, 그 아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내용과 정책포괄 범위, 유사성, 실천방안을 검토해 국정과제 단위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했다. 201개 공약을 892개 세부공약으로 재분류한 뒤 각 세부공약별로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심층토론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해 냈다. 국정기획위가 그동안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기초연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통신요금 인하 ▲군 장병 월급 인상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신설 등이 있다.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지방 균형 발전 등을 제시했다. 국정과제의 이행계획도 3단계에 걸쳐 제



19일 오후 '100+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이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시했다. 혁신기(1기·2017년 5월~2018년), 도약기(2기·2019년~2020년), 안정기(3기·2021년~2022년 5월)로 나뉘 1기에는 개혁과제를 시행하고 2기에는 본격적인 정책성과를 창출해 내며, 3기에는 과제를 완수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한 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정과제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도 공개했다. 국제 및 해외수입 확충으로 82조6,000억원을 확보하고,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을 마련해 총 178조원의 자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공수처·전작권 등 총망라 3단계 이행... 재원마련 방안도

공수처·전작권 등 총망라 3단계 이행... 재원마련 방안도

전주시의회 5분 발언

박병술 “한옥마을 연계 동남부권 문화벨트 조성을”

전주시의회는 19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를 발표했다.

박형배 의원은 전주시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적절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진중한 의회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사전 예방적 소통체계의 방식을 마련해 시민이 협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배 의원

박병술 의원은 “한옥마을과 연계해 동남부권 문화벨트 조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의 관광산업에 의한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숙박 없는 통과형 또는 방문형의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제는 관광객이 관광을 위한 새로운 정착수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병술 의원

이어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8월 준공하는 오목교와 연계해 무형유산의 가치를 전주시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며 “유·무형의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공존하는 체험, 체류하는 관광지가 되도록 육성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남관우 의원

남관우 의원은 진안 용담댐 수원지 지역과 상생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극심한 가뭄에서도 전주 시민들은 제한급수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전주시민의 생명줄인 용담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진안지역과 그동안 전주시의 주요 수원지였던 원주, 임실 등 이웃 지역 농산물을 비롯한 특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아울러 상생 장터 개최 등을 제안했다.



송정훈 의원

송정훈 의원은 전주 관문이라는 중요한 입지에 위치했음에도 외곽의 농촌동이란 이유로 항공과 같은 군사시설을 설치하며 지역개발 정책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조촌·동산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시장의 진정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서남대 교수협, 서남대 정상화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9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춘진 도당 위원장과 서남대 서정섭 교수 등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남대 사태 경과 보고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안한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움직임에 대해서 폐교 절대 불가 방침과 학교 정상화 노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정섭 교수는 “김삼곤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임명되자마자 폐교설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교육부도 서남대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춘진 도당 위원장은 “서남대는 남원지역의 문제 뿐 아니라 서남권과 전북 의료계 전체 문제다. 서남대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